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전주권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 4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관에서 실시된 전주특례시 지정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

# '지역 소외 없도록 국가 차원 지원 필요'

최근 전국적으로 광역도시간 연합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뤄내는 메가시티(Megacity)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수십년간 국가발전전략에서 외면받아온 전북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리적 여건과 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북권과 강원권, 제주권을 하나로 묶는 '강소권 메가시티'가 포함된 '3+2+3 광역권' 추진전략을 내놓자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국가의 포용성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전주권이 다른 지역과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교수의 제안은 중앙정부가 일정 지역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 방식에서 자율·다양·합의·책임의 원칙에 기반한 상향식 특례제도로 바꾸자는 것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누적된 지역 불균형 고리 끊어야  
행정전문가들의 이 같은 논의는 광역시의 유·무 여부 하나만으로 오랜 기간 누적된 지역간 불균형을 끊어내고, 그간 소외 받았던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역간 통합의 연결고리가 없는 전주권의 경우 외부 지원을 통해서만 몸집이 커질 수 있고 그 몸집을 키워주어야만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메가시티 구상, 누적된 역차별 가속화 우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도권 등 광역 도시 울림현상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도 서울과 지난 1960년대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로 승격한 도시들은 해당 권역의 도(道)까지 상생 발전시키는 기록적 역할을 하며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는 광역시가 없는 도시들의 성장을 저해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광주가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주민 생활권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면서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받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국가에 산규모만 살펴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 대전·충청·세정 등과 비교하면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북과 충북, 강원 등 지난 반세기 동안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온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이 국가예산 등에서 더 많은 몫을 챙기며 더욱 부자가 되는 동안 낙후가 심화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을 타파하고 지역이 고루 상생하는 것을 목표로 한 포용성과 균형발전 정책을 내세웠지만 오랜 기간 누적된 불균형 현상은 깨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남 등 기존 광역시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초광역협력사업인 메가시티 구상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권역별 균형 발전을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북 등 광역간 협력이라는 구호를 만들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메가시티 논의에서조차 배제되면서 그간 누적돼온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로 제시한 '3+2+3 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에서조차 광역시가 없는 전북·제주·강원은 광역적 기반이 없어 실효성이 전혀 없는 강소형 메가시티로 분류됐을 뿐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특례시로 지정된 지자체도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수도권과 경남권의 4곳 뿐인 것도 향후 국가균형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 ▲전주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

이러한 가운데 국내 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광역시가 없는 전주권에 대해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1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서울행정학회(회장 한인섭)의 2021년도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연구기관 관계자, 학계, 언론인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분권시대 대도시 제도의 방향 및 입법과정과 규제 개혁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특히 이날 학술대회의 지방분권시대의 대도시 제도 방향의 탐색' 분과 세션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도시 특례 부여 등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아 전북대 교수는 전주권 광역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교수의 제안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강원·제주 권역의 경우 메가시티 구성을 위해 요구되는 광역도시 기반조차 없는 만큼 선결조건으로 먼저 전주 또는 전주권에 대한 광역시에 준하는 광역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결조건이 해결되어야 기존 전북도와 전주 광역권을 묶어서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실질적인 포용적 성장 지원책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대도시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지역 특성과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대도시 특례 부여 기준 마련을 주장했다. 그는 대도시에 대한 정책의 방향 설정 시 인구 규모를 중심으로 도시 특성·행정적 특성, 국토의 균형발전 특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하동현 전북대 교수는 '대도시 지정 절차에 관한 연구' 제하의 발표를 통해 제



지난 2019년 4월 4일 열린 전주 특례시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

국가균형발전 촉진 취지 '3+2+3 광역권' 메가시티 전략 조차 전북, 광역적 기반 없어 실효성 전혀 없는 강소형 메가시티 분류 전문가들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부여해야" 광역시 위상 인정받게 되면 가용예산 증액부터 수도권·지방 양극화 문제 완화로 기대심리 ↑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2019년 2월 12~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에서 균형발전 위한 혁신성장 거점 도시 육성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김윤상기자